완도군 고위공무원

공동주택 건축 인허가 조직적 방해 의혹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진·출입로 확보 허가 요건으로 의결

업체, 의결과정 공정하지 않아…“행정처분 이해할수 없다”

완도군 고위공무원들이 아파트 시행사업자가 신청한 공동주택 인허가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의혹을 주장하고 나섰다.

A 업체는 2019년 하반기부터 완도 D 아파트 인근에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주택신축 인허가를 진행하였다.

완도군은 D 아파트 주민들이 진·출입로 문제와 주차장, 조망권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자 사업체에 민원을 통보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를 요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에 의하면 건축 심의 신청 후 D 아파트에 거주하는 완도군 고위공무원들은 주민들에게 탄원서를 받아 집단민원을 제기하게 하는 등 사업 방해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고위직 공무원인 B 씨는 건축심의위원들에게 청탁 전화를 한 사실도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에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D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할 전용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 등 나름 조치를 하였고 지난해 7월경 건축 심의를 받았다.

건축 심의 후에도 이 들 고위직 공무원들의 방해는 계속되었고, 개발행위의 요건인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심의까지 7개월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1차 도시계획분과 심의에서는 교통환경평가를 하라는 보완사항이 있어 평가용역을 하였고, 교통환경이 아파트 신축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결과를 받아 2차 심의를 신청하였다고 밝히고, 2차 심의에서는 1차 때 거론되지 않았던 별도의 진·출입로 확보와 인근 사거리 신호등 체계의 문제를 조치하라는 의결이 나와 이때부터 업체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는 허가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완도군청 고위공직자들의 영향력이 작용하여 완도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진, 출입로 확보를 허가 요건으로 의결하였고 의결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업체 관계자는 법적으로 진입도로 폭이 8m 이상일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1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가 사용 중인 진입도로는 8m이므로 함께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별도의 진. 출입로를 확보하라는 완도군의 행정처분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완도군의 인허가 부서의 책임자인 모 국장은 업체가 신청한 금번 허가 신청은 조치결과가 미흡하여 불허할 예정이며 4월2일까지 이의신청 통보했다고 밝히며 조건부 승인 요건인 별도의 진·출입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허가는 어려우며 결론적으로 행정소송의 방법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완도=이민혁 기자

세계 여성의 날

“여성 돌봄 노동환경 개선하라”

3·8 세계여성의날기념 광주여성대회 추진위원회가 8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 9층 다목적강당에서 '2021 3·8세계여성의날기념 광주여성대회'를 열고 여성 인권 보장과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세계 여성의 날' 113주년을 맞이해 광주의 시민사회단체가 기념 행사를 열고, 코로나19 시기 여성인권 증진과 노동자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광주여성대회 추진위원회는 8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에서 '2021 3·8 세계 여성의 날기념 광주여성대회'를 했다.

행사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광주 시민단체 협의회 박재만 상임대표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 YWCA등이 참석했다.

시민사회단체는 '3·8 여성 선언문'을 낭독하고 여성 노동자 처우 개선·인권 증진·돌봄 공공성 강화·여성 관련 제도 보완 등을 촉구했다.

단체는 "코로나19 여파로 여성 노동자의 고용이 악화하고 소득이 감소했다. 2020년 5월 기준 여성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같은해 1월보다 3056명 늘었다. 남성 실업급여 수급자 1538명보다 2배 많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여성이 주를 이루는 돌봄 노동자의 근무 환경이 악화했다. 공공시설 폐쇄로 인한 돌봄 부담도 늘어 여성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며 “여전히 돌봄의 주체가 ‘여성’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정 기자

중고차 매매단지 공매차량 훔친 외국인 일당 검거

문 안 잠겨있는 장기 미거래 차량 허점 노려

광주 지역 중고차 매매단지에 보관 중인 차량을 훔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회수 차량 중에서 마약류가 발견됨에 따라 관련 수사도 벌인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중고차 매매단지 내 판매용 차량 7대를 훔쳐 몰고 다닌 혐의(특수절도 등)로 카자흐스탄 국적 A씨 등 외국인 6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 사이 새벽 시간대 광주 서구 중고차 매매단지 주변 주차장 등지에서 도난 당한 공매용 중고차 7대를 잇따라 훔쳐 이 중 4대를 몰고 다닌 혐의다.

조사 결과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국적이 다양한 이들은 장기간 판매되지 않은 일부 중고차가 시승객 편의를 위해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세워진 점을 노려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 안에 보관된 열쇠로 손쉽게 차량을 훔쳐 달아났고, 훔친 차를 또 다른 차량 절도 행각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부산·경기 안성·경남 함안·전남 해남 등지에서 도난 차량 4대를 회수했다. 도난 차량 중 경찰이 회수한 일부 차량에선 마약류도 발견돼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이슬 기자

여수해상서 어선·석유제품운반선 잇단 화재

전남 여수 해상에서 8일 1800t급 석유제품운반선과 4t 어선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6분께 여수시 대경도 서방 1해리 해상에서 4.2t급 연안복합 어선 A(승선원 1명) 호에 화재가 발생했다.

A 호 인근 대경도 해상에서 어장 정화작업 중이던 행정선 전남 919호 선장의 신고를 받은 여수해경은 경비함정 등을 보내 진화작업을 벌였다.

경비함정 도착 직후 A 호의 조타실 등은 연기가 가득했으며 조타실 일부가 불에 탔으나 인명피해 및 해상오염은 없었다.

앞서 여수해경은 같은 날 오전 9시 3분께 여수시 오동도 북방 1.3해리 해상에서 1877t급 석유제품운반선 B(승선원 14명) 호에서 연기가 발생한다는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 경비함정 확인 결과 선내 갑판에서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화재가 발생했으나 자체 진화했다.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은 없었다.

화재로 화물탱크 및 주변 갑판에 부분적으로 그을음이 발생했으며 화재 원인은 산소용접기를 사용해 파이프 용접작업 중 불꽃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오전 11시 48분께도 석유제품운반선 B 호 기관실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고 통신기(VHF)이용 여수항 VTS로 신고 접수됐으나 기관실 유류 힛팅과정서나온 연기를 화재로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해경은 두 선박 관계자를 상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에 잇따른 화재 선박 사고에 신속한 출동과 진압으로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은 없었으며, 정확한 원인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감히 식판을 던져? 20대 동료 수형자 때린 50대 벌금형

교도소에서 자신에게 식판을 던졌다는 이유 등으로 동료 수형자를 때려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주교도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던 중 20대 동료 수형자 B씨가 ‘식판을 던져 건네줬다’는 이유로 B씨의 멱살을 잡고, 식판을 들어 올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께 B씨와 거실 생활 문제로 다투다 B씨의 멱살을 잡으며 밀쳐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최근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은 A씨의 범행 경위·죄책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뒤쿵’ 가해·피해자 연기車 보험사기단 주범 실형

가해·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차량 2대로 고의 사고를 낸 뒤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20~30대들이 실형과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31)씨 등 4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공범 C(28·여)씨 등 4명에게는 벌금 300~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광주 지역 모 중학교 앞 도로 등지에서 가해·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차량 2대로 여러 차례 고의 추돌사고를 낸 뒤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 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신호 대기 중인 고급 외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크게 다친 것처럼 속여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왔다.

이들은 ‘친구와 다투던 중 실수로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줍다 추돌 사고를 냈다’는 내용 등의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한다. 편취액 또한 상당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